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이란

Islamic Republic of Iran

2023년 6월 30일 | 책임조사역(G3) 김재원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648천 km ² 	인구 87백만 명 (2022 ^e) 	정치체제 신정공화국체제 	대외정책 친러시아, 친중국 
GDP 3,522억 달러 	1인당GDP 4,110달러 	통화단위 Iranian Rial (IRR) 	환율(U\$기준) 42,000 (공식환율) 

- 이란은 2021년 말 확인매장량 기준 원유 세계 4위, 천연가스 세계 2위의 자원부국임.
- 2018년 5월 미국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통칭 이란 핵합의, 약칭 JCPOA) 탈퇴를 선언하고 동년 8월 및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환율 및 물가상승률 폭등, 수출 감소 등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음.
- 미국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유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2021년부터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하였으나, 주요 수출품인 원유가격 하락과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촉발한 공급발 인플레이션으로 향후 경제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 맹주국이자 역내 군사대국으로서 수니파 이슬람의 맹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지역 패권을 두고 오랜 기간 경쟁 관계에 있으나, 2023년 중국의 중재로 7년 만에 국교를 정상화함에 따라 중동 지역 내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10. 23 수교 (북한과는 1973. 4. 19)

주요협정 문화협정('75), 외교관·관용사증면제각서교환('76), 상표권·특허권보호각서교환('76), 수산협력협정('78), 사회보장협정('78), 항공협정('01), 투자증진·보호협정('06), 무역협정('09), 이중과세방지협정('09), 세관협력·상호행정지원협정('17), 해운협정('08), 형사공조조약('18), 범죄인인도조약('18)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186,342	177,469	195,461	농약 및 의약품, 기타정밀화학제품, 의료용기기
수입	8,605	5,690	11,111	질소비료, 기호식품, 정밀화학원료

해외직접투자현황(2023년 3월말 누계, 신규법인 수 기준) 34건, 58,990천 달러

국내경제

[참고] 3중 환율제도의 폐지(2022년 3월)로 이란의 GDP 통계 대폭 수정

- 2018년 도입한 생활필수품 수입 보조금 성격의 3중 환율제도가 2022년 3월 공식 폐지됨에 따라 IMF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해온 이란의 GDP 통계에 대폭 수정(소급 적용)이 가해졌음.
- IMF는 2022년까지 이란의 GDP 및 1인당 GDP(미 달러화 환산) 산출 시 정부환율인 달러당 42,000리알을 적용해 환산한 경제지표를 발표해 왔으나, 2023년 4월 발간한 World Economic Outlook부터 시장환율*을 적용해 대폭 수정된 통계를 발표함.

* 적용 환율(시장환율) : 202,902(2020년) → 263,296(2021년) → 309,691(2022년)

[표 1] 정부환율 폐지 후 이란 경제지표의 수정 현황(소급적용)

구분	2020년		2021년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전	수정 후
GDP(십억 달러)	938.1	195.5	1,426.3	289.3
1인당 GDP(달러)	11,148.8	2,326.7	16,783.8	3,409.8

자료: IMF

- 2018년 이란 정부는 2018년 4월 23일 외환 확보 및 무역에 필요한 외환의 거래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온라인 외환거래 시스템인 NIMA를 개설하여 자국 기업들이 무역에 필요한 외환을 NIMA를 통해 거래토록 했으며, 동년 6월 23일부터 수입품목을 4개 군으로 분류해 각각 다른 환율을 적용하고, 이듬해인 2019년 12월 24일부터는 3개 군으로 재편하였음.
- 1등급군인 필수품, 핵심 산업재 무역에는 정부환율(2018년 4월 10일 고시된 달러당 42,000리알의 고정환율), 2등급군인 기타 일반 산업재 무역에는 NIMA 환율, 3등급군인 일반 소비재 무역에는 시장환율(현지어로는 Azad)을 적용하여 기업이 필요한 외환을 매입토록 하였음.
- NIMA('외국환통합거래규정'을 뜻하는 현지어 Nezam-e Yekparche-ye Mo'amellat-e Arz의 약자) 환율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상황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로 간주되나, 대체로 그래프 상에서 시장환율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임. 또한 일반적 환전이 불가능하며,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른 수입액 환전만이 가능함.
- 이러한 3중 환율정책은 미국의 JCPOA 탈퇴 후 대 이란 경제제재가 재개되자 외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자국 제조업의 자생적 성장 촉진과 지하경제의 일정 부분 통제라는 부가적 효과도 거두었음. 이란 정부는 NIMA를 이용하는 수출업체(원유 수출기업 제외)의 외화가득액(수출금액 - 수출품의 제조를 위해 지출된 수입 원재료 또는 연료 등의 합계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외환을 매각토록 의무화하였음.
- 이란 정부는 공식환율과 시장환율과의 괴리가 커 시장이 왜곡되고 실질적으로 물가안정 효과도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3중 환율제도를 폐지하였음. 시장환율은 이란 리알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로 인해 2023년 5월 말 기준 미 달러당 522,267리알로 정부환율보다 무려 12배 이상 높게 형성됨.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1.8	-3.1	3.3	4.7	2.5
소비자물가상승률	30.2	34.6	36.4	40.1	49.0
재정수지/GDP	-1.6	-4.5	-5.8	-4.2	-4.0

자료: IMF, EIU

원유수출 수익 감소로 인해 2022년 경제성장률은 전년의 거의 절반인 2.5%로 하락 추정

- 2015년 7월 이란과 P5+1* 간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통칭 '이란 핵합의') 체결 및 발효에 따른 경제제재 완화로 이란은 2016~17년 원유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 등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였으나, 2018년 5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같은 해 8월 및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 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였음.

* 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및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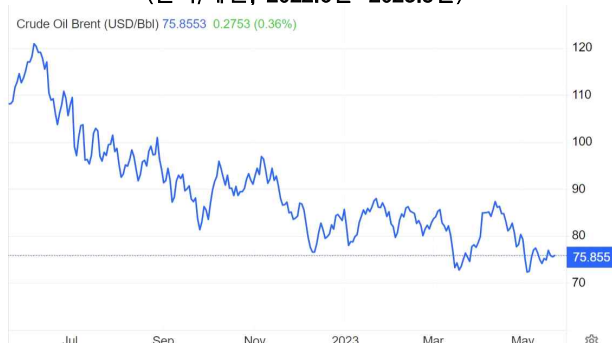
- 이에 경제성장률 및 수출증가율의 마이너스 전환, 환율 및 물가상승률의 폭등 등 이란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여기에 추가 경제제재와 대규모 홍수 피해까지 겹쳐 이란 경제는 2018~19년 역성장을 시현함.
- 그러나 2020년부터 원유 수출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이 증가하여 석유 부문의 성장을 견인하고, 이는 비석유 부문의 성장으로도 이어져 이란 경제는 2020년에 코로나 19 팬데믹의 여파를 극복하고 3.3%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으며, 2021년에는 원유 수출이 더욱 증가하여(일평균 원유 수출규모는 2020년 40만 배럴 → 2021년 71만 배럴 추정) 4.7%의 성장을 기록하였음.
- 2022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진정 국면을 보이며 원유의 국제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선진국들의 긴축 경제정책 기조 지속과 세계경기 둔화로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이란의 원유수출 수익도 감소한 결과, 이란의 2022년 경제성장률은 전년의 약 절반 수준인 2.5%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표 2] 에너지 국제가격 추이

구분	2021	2022				2023		
		1/4	2/4	3/4	4/4	1/4	5.10일	
유가 (\$/배럴)	Brent	77.78	104.71	109.03	85.14	78.77	79.89	76.41
	WTI	75.21	100.28	105.76	79.49	80.26	75.67	72.56
	Dubai	77.12	107.71	113.40	89.51	85.91	78.08	75.74
천연가스	미국 NYMEX (\$/백만BTU*)	3.730	5.640	5.420	6.770	4.480	2.220	2.191
	영국 ICE (pence/therm**)	170.64	299.32	248.30	352.89	186.05	118.03	80.56

자료: 수출입은행 2023년 1분기 석유가스 시장 분기보고서

[그림 1] 브렌트유 가격 추이 (달러/배럴, 2022.6월~2023.5월)



자료: Trading Economics

국내경제

- 2023년에도 세계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특히 올해 초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re-opening) 효과가 예상보다 부진하여 원유의 국제수요는 감소 추세인 반면, OPEC 비회원 산유국들의 산유량 증가와 비축 재고량 소비로 원유 공급이 증가하여 원유 판매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여기에 경제제재 지속으로 인한 외국인직접투자 및 금융거래의 제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리알화 가치 하락 지속으로 2023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약간 하락한 2.0% 안팎에 그칠 전망이며, 향후 4개년(2024~27년) 간의 경제성장률도 3%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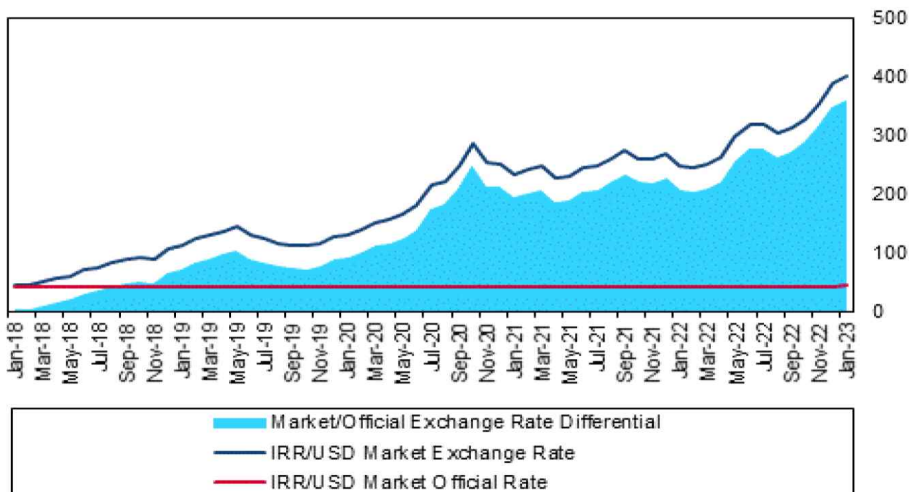
* 이란 경제성장률 전망(EIU) : ('24)2.1% → ('25)2.5% → ('26)2.6% → ('27)2.7%

- 이란은 현재 역시 서방의 경제제재 대상국인 러시아와 대 중국 원유 수출에서 가격할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올해 초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re-opening) 효과가 예상보다 부진하여 중국의 원유 수요 증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러시아와의 가격할인 경쟁은 2023년에 더욱 심해져 석유 부문의 성장률이 2022년보다 둔화될 전망이며, 이는 이란의 경제성장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공급발 인플레이션, 환율 보조금 폐지, 리알화 가치 하락으로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역대 최고치인 49.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에도 4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이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계산 바스켓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식품과 주거비로,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촉발된 공급발 인플레이션으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였음. 여기에 3중 환율제도의 폐지로 식료품을 비롯한 필수품 수입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미국과 이란 간의 핵합의(JCPOA) 복원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리알화 가치가 하락세를 거듭하여 수입물가 상승을 재촉한 결과,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역대 최고치인 49.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리알화의 미 달러당 시장환율은 2021년 평균 263,296리알에서 2022년 평균 309,691리알로 상승하였으며, 2023년 5월 말에는 522,267리알로 가파르게 급등하였음.

[그림 2] 이란의 정부환율 대비 시장환율 월별 변화 추이



자료: Bondbast, Fitch Solutions.

국내경제

- 수자원 부족으로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식료품 공급망이 확보되지 못해 농산물 및 식료품 수입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란은 러시아산 밀, 보리, 옥수수의 주요 수입국으로, 밀의 경우 2021/22회계연도(2021.3.20.~2022.3.21.) 중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한 3억 달러 이상의 밀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였음.
- 경기침체 장기화, 높은 실업률로 인한 구매력 저하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매매거래 수요보다 임대수요가 높아, 임대료 상승에 따라 주거비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6월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주 드니프로 강의 카호우카 댐이 파괴되어 곡물 생산지대가 홍수 피해를 입으면서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급등)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곡물 수요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란의 수입비용이 더욱 증가하여 (이란의 밀 수입량의 30%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점유) 2023년에도 40%대 초반 수준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022년 재정수지는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GDP 대비 -4.0%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에는 GDP 대비 -5%대 후반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 2022년 상반기 국제유가 상승과 원유수출 실적 호조, 일부 보조금 폐지 등으로 인한 추가 세수 확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지출 증가, 가뭄으로 인한 피해복구 지출, 빈곤층 사회 복지금 지출, 공공 부문의 임금 인상과 퇴직연금 지출 증가 등 재정지출 요인으로 인해 2022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4.0%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세계은행의 Economic Monitor는 이란 의회가 2023/24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추정 세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원유의 수출가격을 배럴당 70달러, 원유의 일평균 수출량을 1.4백만 배럴로 정하고 전년 대비 세수는 60% 이상, 전체 재정수입은 약 43% 증가할 것이라는 이란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제로 하였으나, 핵합의 복원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제 세수와 재정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이란은 2023년에도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망함.

[표 3] 이란 정부의 재정 내역: 2021/22회계연도와 2022/23회계연도 예산안 비교

	2021/22 (IRR billion)	2022/23 (IRR billion)	2022/23 (US\$ billion) ^a	Growth (%)
Total revenues	8,504,460	12,173,419	52.9	43.1
Current revenues	4,548,990	6,977,103	30.3	53.4
Tax revenues	3,298,390	5,324,498	23.1	61.4
Direct taxes	1,490,451	2,476,481	10.8	66.2
Indirect taxes	1,807,939	2,848,017	12.4	57.5
Other revenues	1,250,600	1,652,606	7.2	32.1
Disposal of non-financial assets	3,955,470	5,196,315	22.6	31.4
Total expenditures	10,951,809	12,591,254	54.7	15.0
Current expenditures	9,189,164	9,990,086	43.4	8.7
Capital expenditures	1,762,646	2,601,167	11.3	47.6
Operational balance	-4,640,174	-3,012,983	-13.1	-35.1
Budget balance	-2,447,350	-417,835	-1.8	-82.9
Disposal of financial assets	4,274,480	1,767,900	7.7	-58.6
Acquisition of financial assets	1,827,400	1,350,065	5.9	-26.1
Net disposal of financial assets	2,447,080	417,835	1.8	-82.9
Government general resources	12,779,209	13,941,319	54.7	9.1

* 2022/23년 달러 환산시 230,000리알 적용

자료 : PBO and World Bank staff calculations

국내경제

- 2023년 5월 현재 원유수출 수익과 각종 세수(직접세와 간접세 모두)가 정부의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보조금의 폐지 또는 축소는 서민층의 맹렬한 반발로 인해 기대하기 어렵고, 댐 건설 등 국가 주도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더 이상 유예시킬 수 없다는 중론이 이란 정부 내에서 힘을 얻고 있어 2023년에는 이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이란의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5%대 후반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IMF는 추정하고 있음.
- 식료품 등 필수 수입품에 적용되던 공식환율은 폐지되었으나, 이란 정부는 휘발유 등 에너지 보조금의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됨. 2019년 11월 이란 정부는 휘발유 가격 50% 인상을 시도했다가 이에 반발하는 서민층의 전국적인 과격 시위에 직면(당시 31개 주 중 29개 주에서 시위 발생, 진압 과정에서 수백 명이 사망)하자 에너지 보조금의 단계적 축소에 정책 방향을 선회하였음.¹⁾
- 농업 부문의 발전에 긴요한 수자원 확보와 기반시설 조성(댐 건설 등)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의 투자 없이 정부의 재정능력만으로는 막대한 자본지출을 부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빈도 증가, 농업 생산성 저하로 농업 부문의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임.
- 이란 정부는 정부 소유 유가증권과 국영기업 지분의 매각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서방의 경제제재로 해당 자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자 중앙은행에 부채를 전가하는 정부 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 방식²⁾을 통해 재정적자를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와 국채 이자지급액 증가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

1)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휘발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 보조금으로 2021년 약 430억 달러를 지출한 데 이어 2022년에도 약 500억 달러(GDP의 약 14%)를 지출하였음. 이란의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이며, 휘발유 가격은 보조금으로 인해 2023년 6월 현재 리터당 29센트, 갤런당 1.1달러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에 속함. 이란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낮은 연료비용이 에너지 과소비, 보조금 부정 수급, 밀거래(생산량의 17% 추정) 양산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고 2010년부터 보조금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에너지 가격 인상에 반발하는 서민층의 시위가 확산되면 철회했다 재추진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개혁의 실효성이 결여됨. 2023년 2월 말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은 에너지 보조금 지출 증액내용이 포함된 2023/24회계년도 예산안(전년 대비 40% 증액)을 국회에 제출, 정부가 서민층의 반발을 피하고자 향후에도 에너지 보조금의 축소 또는 폐지에 신중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예상케 함.

2)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국채를 매입하는 것, 즉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정부의 재정적자를 충당해 주는 것을 의미함. 재원의 원천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이며, 시장이 아니라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나선다는 점에서 통상 재정적자 충당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이 소진된 경우 최후에 동원되는 비전통적 수단으로 분류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 상 수 지	26,241	-1,652	-708	11,144	25,636
경상수지/GDP	10.7	-0.7	-0.4	3.9	7.3
상 품 수 지	31,804	1,885	3,236	15,844	31,287
상 품 수 출	92,651	59,975	49,848	79,470	102,790
상 품 수 입	61,847	58,090	46,612	63,626	71,503
외 환 보 유 액	98,216	83,159	62,938	60,236	70,608
총 외 채	10,623	9,213	9,142	8,675	9,075
총외채잔액/GDP	4.3	3.8	4.7	3.0	2.6
D.S.R.	1.4	2.4	3.0	1.9	1.5

자료: IMF, EIU

2022년 원유수출 실적 호조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GDP 대비 7.3% 흑자 추정, 2023년에는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과 제재 강화로 인해 흑자폭 위축 전망

- 이란의 상품무역은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였으나, 2021년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은 원유수출 수익 증가에 의해 견인된 상품수출액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가 급증하였음 (2020년 32억 달러 → 2021년 158억 달러). 이러한 추세는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어 경상수지가 GDP 대비 7.3%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3년은 세계경기 둔화, 특히 중국 리오프닝 효과의 예상 밖 부진으로 원유 국제수요의 증가율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대 이란 경제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란의 원유 수출량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 전망, 식료품과 의약품 가격의 급등(매년 10~12%씩 상승), 대 중국 원유 수출에서 러시아와 가격할인 경쟁을 벌이는 상황 등으로 인해 상품수지 흑자폭은 GDP의 4%대로 하락한 이후 2024~27년 중 1~2%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전망이다.
- 2022년 하반기 OPEC+ 회원국들이 일평균 산유량을 200만 배럴 감축기로 결정했음에도 미국 등 비OPEC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 증대와 주요국의 경기 회복 둔화로 국제유가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음. 2023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로 OPEC+ 주요 회원국들이 2차 감산 계획(116만~166만 배럴/일)을 기습 발표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으나 곧 가격조정이 뒤따랐음.
- 2023년 6월 4일 OPEC+는 정례 장관급 회의 후 3차 감산 계획을 발표했음. 이번 감산계획은 사우디아라비아가 7월부터 하루 100만 배럴을 추가 감산하고 다른 회원국들은 기존 감산계획 기한을 올해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에너지 시장 분석가들은 세계경기 둔화 지속, 제재를 우회하는 러시아의 원유 공급 등으로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대외거래

- 이란은 제재 감시망을 피해 오만이나 아랍에미리트 등 인접 국가를 경유해 원산지를 세탁한 후 중국에 원유를 수출하며, 주로 물물교환(barter) 거래 형식으로 교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EU와 미국은 우회 수출을 차단코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제재 대상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음.
- 2022년 12월 EU는 반정부 시위자에 대해 이란 정부가 자행한 고문 및 사형 집행 등 인권침해에 연루되었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인 24명과 관련 기관 5곳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으며, 2023년 3월 미 국무부는 이란의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한 혐의로 중국 기업 등 6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란에 대한 제재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음.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 규모 및 외채 관련 지표 등을 고려 시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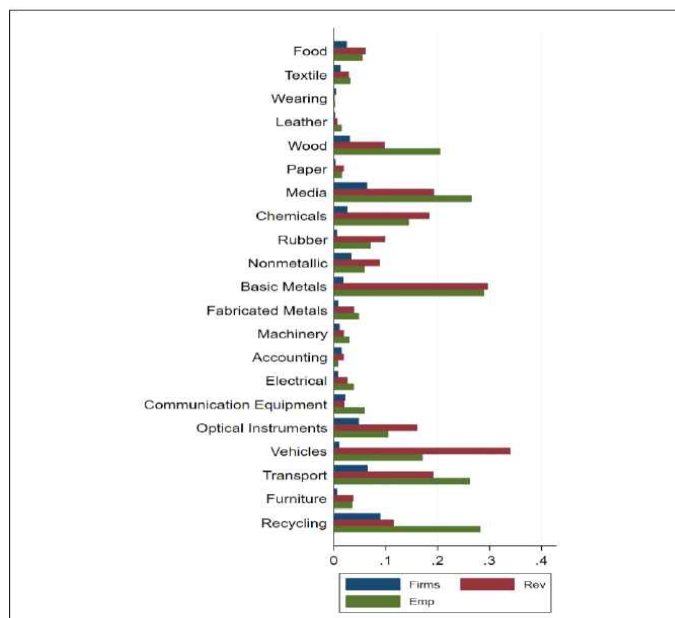
- 2022년 말 기준 이란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706억 달러로 동년 월평균 수입액의 9.7개월분으로 추정되며,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8.1%), D.S.R.(1.5%),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2.6%) 등의 지표로 미루어 외채상환능력 지표는 양호한 수준으로 추정됨.

구조적취약성

혁명수비대, 성직자 계급 등 강경보수와 특권층이 장악한 폐쇄적인 경제 체제

-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공화국 형태의 정치체제를 수립했으나, 실질적으로 최고종교지도자(라흐바르)가 국방·사법·종교·경제 등 모든 사안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갖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함.
- 이란 혁명 당시 이슬람 체제 수호 명목으로 혁명 지도자 루홀라 호메이니가 창설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란의 정규 군대와는 별개의 군사조직으로, 내부 안보(종교지도자 보호) 및 국외활동(혁명수출과 중동 내 시아파 보호)을 수행하는 강경 보수 성향의 무력집단이자 산업계와 경제계 전반에 걸쳐 지배력을 과시하며 이란 경제의 약 20~40%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란 권력층과 혁명수비대는 국영기업 및 그 계열사를 운영하며 석유·가스 등 국가 전략자산을 독점하고 막대한 자본력으로 산업계와 경제계에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음. 또한 건설·금융·통신·관광 등 다양한 산업에 진출해 있으며, 민간 제조업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이들은 보조금이나 관세 혜택은 물론 용이한 금융조건, 낮은 과세율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 국영기업의 경우 재무건전성 관련 규정 및 감독기관의 감시가 부재하고, 소속 노동자들은 종신계약 수준의 고용안정성을 보장받고 있음. 이란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자의 규정 위반 시 서면경고가 원칙이며, 추후 규정 위반 지속 시 노사 협의체 성격의 이슬람노동협의회(Islamic Labor Council) 협약에 따라 퇴직절차를 진행해야 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며, 국영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손실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어 기업의 수익성 향상 목표와 의지가 약한 편임.
- 2021년 6월 제13대 대선에서 대표적인 강경·보수 성향인 에브라힘 라이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현직 라흐바르인 알리 하메나이에 이은 차기 라흐바르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승계 불발 시에도 다음 대선에서 연임할 가능성이 높아 2029년까지 이란의 경제 고립화와 보수성은 심화될 전망이다.

[그림 3] 이란의 제조업 분야별 국영기업의 비중, 수익률, 고용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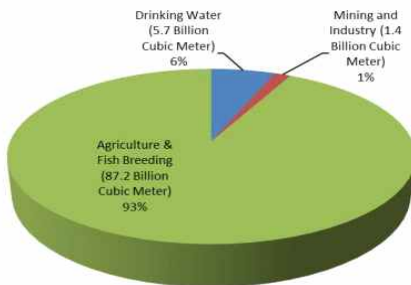
출처: IMF Working Paper

구조적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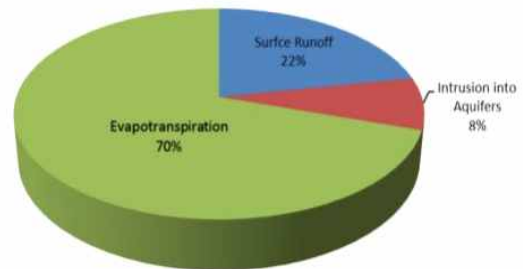
기후변화 가속화로 수자원 부족 심화, 토양염분화로 농업생산력과 농업인구 감소

- 농업은 과거 2004~10년 이란 평균 GDP의 12~14%를 차지해 왔으나 2021년 GDP 대비 10%로 비중이 감소함. 국내 노동인구의 2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국토의 11%가 농업지대로 북서쪽 천수농업지(빗물을 사용한 자연적인 농업지)를 제외하면 모두 관개 농업지임. 2019년 식품 소비량의 85%를 국내 생산분으로 충당했으며 비석유 산업 부문 생산의 25%를 농업 부문이 점유함. 주식인 밀의 경우 2017년 순수출국으로 전환될 정도로 국내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으나, 현재는 농업생산량 감소로 부족분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등 농산물의 대외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음.
- 적은 강수량(대부분 수분 증발로 소실)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대기 건조화로 토양염분화³⁾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는 농업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경작 패턴을 변화시켜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UN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인구의 74%가 도시에 거주 중이며 도시인구는 매년 약 2%씩 늘어나고 있는 반면, 농촌 인구는 약 1%씩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함.

[그림 4] 이란의 수자원 부문별 이용 현황



[그림 5] 이란의 수자원 확보 현황



자료: FAO

-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란의 수자원 가용량은 m³당 20센트(국제기준 1달러)로 가성비가 낮고, 기후 온난화로 수분 증발량이 증가하여 지하수의 20%, 적설량의 5%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연평균 강수량이 228mm로 취수의 대부분이 농업용수(86km³)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지하수(6.2km³) 및 산업용(1.1km³)으로 사용됨. 지하수 과잉 채수로 지하층 오염, 지반 약화, 지하수 고갈이 심각해지고 있음.
- 이란 정부는 농업 생산력 향상과 수자원 관련 산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해외 기술력과 투자 없이는 2023~27년까지 물 부족 국가로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2020년 기준 이란의 총 저수용량(dam capacity)은 44.44km³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터키(157.8km³),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라크(151.8km³)에 비해 현저히 적은 규모임. 이에 이란 정부는 추가적인 댐 건설 및 저장능력 개선을 주요 경제개발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현재 이란 내에서 운용 중인 183개 댐의 총 저수율은 47%, 총 저수량(dam reservoirs)은 50.5백만 m³로 집계됨. 지역별로는 52개가 카스피해 연안, 12개가 우르미아 분지(Urmia Basin), 68개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경계수역, 34개가 중앙 고원에 위치해 있음.

3) 염분화된 토양은 식염수와 나트륨을 포함한 염분이 많은 토양인 소딕(sodic)으로 구성됨. 이는 농업생산성, 수질, 토양생물 다양성 및 토양 침식의 현저한 감소를 유발함. 토양 염분화가 시작되면 오염물질에 대한 완충제 및 필터 역할 능력이 감소하고 작물이 물을 섭취할 수 있는 능력과 미량 영양소의 가용성을 모두 줄임. 토양염분화의 주 원인은 이온 농축, 관개 농업 등임.

구조적 취약성

빈번한 자연재해와 복구능력 부족으로 인명손실과 재산 피해가 반복

- 이란은 유라시아판과 아라비아 판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지진발생빈도가 잦은 편으로, 2~3년 주기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반복되고 있어 인명피해와 경제피해가 막심함.
- 2017년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630명 이상의 사망자와 8,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2019년에는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해 재산피해를 냄. 2020년에는 이란 터키 국경지대에서 규모 5.9의 지진으로 사상자가 발생함. 한편, Iranian Seismological Center에 의하면 2023년 들어서도 1월 18일 5.4 강도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21개 안팎의 여진이 감지되었음.
-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는 이란 각지에 폭우/홍수와 가뭄을 교대로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가뭄의 경우 기간이 늘어나고 주기도 잦아지고 있음. 이란은 특히 국토의 약 70%가 산악 지대로, 홍수로 인한 산사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음.
- 2018년 홍수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재산피해가 막심했으며, 2019년 홍수가 발생해 26여개(31개 주) 주에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음. 2022년 폭풍우를 동반한 호우가 1월 1일부터 나흘 동안 계속되어 20여개 지방에서 전력공급 차단, 도로 및 다리 침수, 식수공급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 2017년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컸으며, 2018년에도 가뭄으로 인한 흉작으로 식량난을 겪은 바 있음. 2021년에는 남서부 지역의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2~3도 상승하고 강수량이 50~85% 감소하여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직면, 가뭄과 더위 속 단수조치에 항의하는 집회가 후제스탄 주에서 시작되어 이란 전역 30여개 도시로 확산된 바 있음.

성장잠재력

2020년 말 확인매장량 기준 원유 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의 자원 부국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에 따르면, 이란은 2020년 말 확인매장량 기준 원유 매장량 세계 4위(1,578억 배럴, 전 세계 매장량의 9.1%) 및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32.1조 m³, 전 세계 매장량의 17.1%)의 자원 부국임.
- 다만, 경제제재로 인해 천연가스 생산 증대를 위한 채굴 설비와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생산량은 정체되어 있음. 아울러 2020년 기준 천연가스 생산량의 60% 이상이 내수용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가계 소비량이 산업시설 사용량을 초과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천연가스 수출은 인접국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란산 가스의 주요 수입국인 튀르키예와 이라크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및 투르크메니스탄과는 2021년 11월 28일 3자간 스왑계약을 통해 일 500만~600만 m³의 가스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공급받아 이를 아제르바이잔에 공급하는 3각 무역거래를 하고 있음.
- 최근 천연가스 생산이 투자 부족으로 더한층 부진에 빠져 2022년 12월 24일 이란 언론은 이란 정부가 840개 관공서와 공공 기관에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산업계 역시 에너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이란 시멘트 생산협회의 Ali-Akbar Alvandian 사무총장은 많은 공장이 가동에 필요한 충분한 가스 및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터뷰함. 이란의 주요 산업인 석유화학산업도 천연가스 공급 부족으로 향후 시설 가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지난 10월 이란 국영석유회사 Mohsen Khojastepur 이사는 천연가스 부문에 약 500억 달러 규모(한화 약 63조 6,15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란은 5년 내로 천연가스 순수입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음.

생산단가가 낮은 양질의 원유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여 시장경쟁력 우위 확보

- 이란의 원유는 3대 유종(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중 브렌트유로, 비교적 양호한 품질⁴⁾로 알려짐. 경상수지손익분기유가(external breakeven oil price)도 2022년 배럴당 48.8달러(사우디아라비아는 52.7달러), 2023년 47.2달러(사우디아라비아는 54.7달러)로 채굴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채산성이 높고 시장경쟁력에 우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됨. 다만, 균형재정유가(fiscal breakeven oil price)는 2022년 배럴당 278.3달러(사우디아라비아는 85.8달러), 2023년 351.7달러(사우디아라비아는 80.9달러)에 달해 원유 수출의 증대만으로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경상수지손익분기유가는 산유국의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되는 하단 유가이며, 균형재정유가는 산유국의 재정수지가 0이 되는(즉 균형재정을 이루는) 유가임.

4) 원유는 물리적 성질에 따라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수치가 클수록 '가벼운' 원유로 분류됨. 경질유(輕質油) API34 이상, 중질유(中質油) 30~34, 중질유(重質油) 30 이하로, 가벼울수록 비싼 석유제품의 생산원료로 사용됨. 한편, 유황 함량에 따른 분류는 low-sulfur 1 이하, middle sulfur 1~2, high 2 이상임. 국제 원유시장에서 기준가격으로 통용되는 3대 유종은 유황 함량 및 API도에 따라 품질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저유황 경질유인 WTI의 가격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브렌트유이며, 고유황 중질유(重質油)인 두바이유가 가장 낮은 가격대를 형성함.

성장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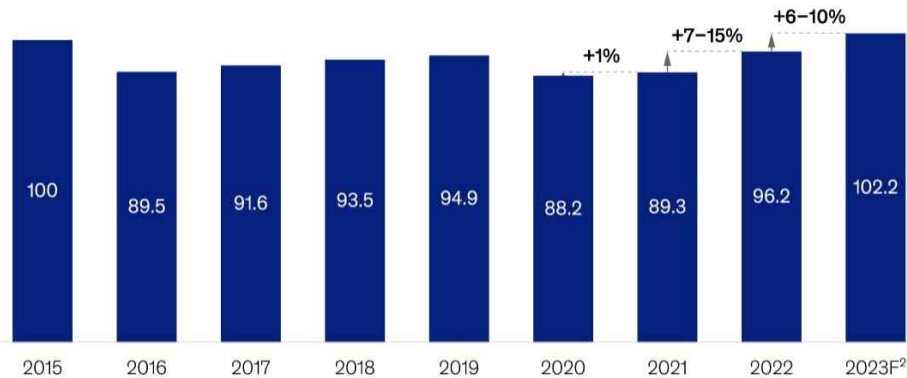
[표 4] 브렌트유 생산국가들의 API, Sulfur(황) 수치

생산국	원유명	API	Sulfur
캐나다	Cold Lake	19.9	3.25
UAE	das	39.2	1.30
	Dubai	31.0	2.04
러시아	ESPO	36.0	0.5
이란	Iran Heavy	30.7	1.8
	Iran Light	33.7	1.5
베네수엘라	Merey	16.0	2.45
	Santa Barbara	36	0.95

자료 : IMF, Energy Insights by Mckinsey

- 2023년 McKinsey 연구소가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20년부터 생산비용이 매년 큰 폭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연평균 9%씩 인상되고 있는 인건비 증가가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중동 국가들의 '현지화' 규정에 따라 비숙련, 고임금,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감내하고 자국민 고용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이란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제공이 가능한 매력적인 시장임. 다만, 서방의 경제제재와 이란 정부가 요구하는 자국 기업과의 과도한 합작 요구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6] 에너지 기업들의 생산비용 인상률



* 26개의 에너지 기업들(다국적기업 7, 국영기업 3, 일반 민간기업 16)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로, 2015년을 100으로 기준하여 생산비용을 대조함.

자료 : S&P Capital ; Mckinsey Energy Insights

정책성과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은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에 실패

- 이란 정부는 리알화 가치 하락과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⁵⁾을 단행한 바 있으나 동 기간 중 미국의 JCPOA 탈퇴,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 대치가 촉발한 제재 강화와 경제성장 둔화로 성과를 거두지 못함. 2019년 7월 이란 내각이 화폐단위를 10,000:1의 비율로 축소하고 화폐의 명칭을 리알에서 토만(toman)으로 변경하는 개혁안을 승인하였으며 2020년 5월 이란 의회와 헌법수호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없음. 2022년 4월 밀수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통화 보유량을 최고 10,000달러로 제한하고(다른 외국통화도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 초과 시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수립하는 등 시장의 외환유동성을 늘리려는 노력을 거듭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함.

2022년 3월 공식환율 폐지 및 식료품 보조금 지급

- 이란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필수 생필품 수입에 적용해온 달러당 42,000리알의 고정된 공식환율을 2022년 3월 폐지함. 여기에 JCPOA 복원 협상이 교착화되며 외환부족에 대한 불안심리와 수입물가 급등이 더해져 2023년 2월 시장환율이 달러당 46.1만 리알까지 급등했으며 EIU는 2023~27년까지 환율이 달러당 80만 리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함.
- 2018년 5월 미국의 JCPOA 탈퇴와 추가 제재로 리알화 가치 하락세가 심화되어 2018년 8월에는 리알화 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172% 폭락하며 달러당 10만 리알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 이란 정부는 2018년부터 식료품 수입에 대한 공식환율 적용을 위해 1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부담이 과도하다고 밝히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식료품 보조금 폐지를 점차 확대하고, 공식환율 폐지로 수입자에게 지급되던 보조금을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입자들의 회계 조작, 밀매 등 불법적인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다수에게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혁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음.
- 과거 2010년 정부의 개혁정책이 에너지 보조금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혁 프로그램은 식료품 보조금에 관한 개혁으로, 하위 40% 소득자(정부가 구분한 소득구간 1~3단계에 해당)에게는 최저임금의 1/5 수준인 400만 리알을 매월 지급하고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군에 속한 국민에게는 300만 리알을 추가 지급할 계획임. 2010년 보조금 지급(현금 직접 지급)과 달리 금년에는 개인 통장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총 2,300만 가구(7,200만 명)가 수급 대상이며, 이란 중앙은행은 총액 400조 리알을 2개월 단위로 개별 수급자들의 은행 계좌에 입금할 것이라고 밝힘.
- 옥수수, 두유, 비정제유, 오일시드, 보리, 밀가루, 밀, 의료용품에 시범적으로 새로운 보조금 지급방식을 적용하고 2022년 5월 10일부터 주식인 빵 구입 시 제한된 수량의 디지털 쿠폰을 발급받아 제품을 구매하게 했으며, 향후 닭, 치즈, 식용유 등으로 쿠폰 구매 가능 대상 품목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5)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액면가(denomination)를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 통상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량을 화폐적으로 표현하는 숫자가 너무 커져 초래되는 국민들의 계산상, 지급상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실시되며, 물가, 임금, 채권/채무 등 경제수량 간의 관계에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음. 실질적으로 화폐가치를 낮추는 평가절하(devaluation)와 달리 소득,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이론상으로는 중립적임.

정책성과

2014년 건강보험 개혁 '로하니케어'와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노력

- 2014년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당시 이란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오바마케어'를 모델로 이란의 건강보험 정책을 '로하니케어'로 명명하고 개혁을 추진함.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극빈층의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며, 현재 인구의 90%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2025년까지 전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임. 로하니케어는 부가가치세(물품의 9%) 수입 중 1%, 에너지 보조금 삭감분의 10%를 각출한 금액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보험 가입자에게 매월 38만 리알을 지불하고 국가가 지정한 치료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음.
- 이란 통계청은 건강-의료 서비스 비용이 매년 평균 36.9%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함. 이란 공공 건강보험의 주 공급기관은 IHIO(Iran Health Insurance Organization)와 SSO(Social Security Organization)로, 가입 의무사항은 매월 급여의 7%를 불입하는 것임. Medical Service Insurance Organization를 비롯한 기타 보험사는 정부 공무원, 학생, 농촌 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한적인 보험 서비스이나, 로하니케어는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음.
- 이란의 의료보험 체계는 보장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중증 질환자의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양한 보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아울러 의약품 구입 재원이 부족하고 의료 비상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능력도 취약한 편임.
- 세계은행은 이란의 건강보험 관련 지출이 2019년 GDP 대비 6.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명목GDP 감소로 인한 통계적 착시효과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함. EIU는 이란의 건강보험 부문 정부지출이 2019년부터 3년 평균 GDP의 7%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가 상승 및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지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2026년까지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정치안정

강경 보수파 중심의 통제 강화로 신정일치 체제 유지 공고

- 이란의 최고종교지도자인 라흐바르는 '신의 대리인'으로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는 최고 지도자이자 사실상의 국가원수로, 이란 특유의 신정일치(神政一致)에 의한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이끌고 있음.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나, 라흐바르에게 대통령 인준권과 해임권이 있어 대통령의 실제 권한은 매우 제한된 수준에 불과함.
- 이슬람 최고위 성직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평의회(Assembly of experts)는 라흐바르 선출권, 최고 지도자의 권력 남용 시 해임권을 갖고 있으나, 라흐바르를 견제하기 위한 초기의 설립 목적과 달리 현재까지 라흐바르에 대한 반대 의견의 제시나 해임 시도는 일절 없음.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들도 선거전에 수호자 평의회(Guardian Council)의 허락을 받고 라흐바르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선언한 뒤에 비로소 출마가 가능함.
- 이슬람 혁명을 이끈 초대 라흐바르인 루홀라 호메이니가 사망한 1989년에 2대 라흐바르로 취임한 아야톨라(Ayatollah, '신의 증거'라는 뜻으로, 시아파의 종교적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가 현재까지 장기집권하고 있으나, 고령과 건강 문제로 차기 라흐바르의 선출이 화두로 떠오름. 차기 라흐바르 후보로는 현 이란 대통령(2021년 6월 당선)이자 대표적인 강경 보수파 인사인 에브라힘 라이시가 유력하며, 하메네이 사후 라흐바르로 취임하거나 2025년 재선에 성공해 2029년까지 대통령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서방의 제재로 인한 경제난 가중과 국제적 고립 심화로 내부 갈등이 누적되며 체제 불만 세력이 늘고 있으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기득권을 단단히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성직자들이 현 체제를 강력히 지지하고, 무력 사용도 불사하며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의 강력한 지원으로 체제 전복의 위험은 극히 희박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사회/경제적 위기와 인권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성직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현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사회안정

반정부 시위는 정부의 강경 진압과 대중의 무관심으로 동력 상실

- 2022년 9월 16일 2022년 9월 마흐사 아미니(Mahsa Amin)라는 여대생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아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도덕경찰에 체포, 연행되어 구금된 후 경찰의 구타 또는 고문으로 추정되는 외상을 입고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이 기폭제가 된 반체제, 반정부 시위가 이란 전역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Human Rights Activists News Agency에 따르면 시위 참가자의 연령대는 10대가 제일 많고, 시위 진압 과정에서 총 2만 명의 시민이 구금되고 530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최소 69명의 아동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됨. 이란 정부는 시위를 주도한 반체제 인사로 지목된 17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2023년 2월 4명을 공개 처형했으며, 5월에는 시위 진압 보안요원 살해 혐의로 체포된 남성 3명을 추가로 공개 처형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음.
- 젊은 세대와 여성, 이슬람 신정일치 체제에 피로를 느낀 국민들이 결집하여 경제 붕괴에 대한 책임과 인권 탄압에 저항하는 시위가 전국에 걸쳐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2023년 5월 현재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전략분석 전문가들은 현재 발생하는 시위들은 이슬람 혁명과 같은 체제 전복의 극적인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필요한 조직력, 자본력, 리더십,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부재하고, 수년 간 감독과 감시로 극한의 고통에 초월해진 패배주의적이고 무력한 국민성이 정부의 강경 진압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 과거 이란 전역에 걸친 전국적인 시위는 모두 4차례로 1999년 학생 시위, 2009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반발하는 Green Movement Protest, 2017~18년 무능한 정부와 이슬람 지도부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거리 시위, 2019년 휘발유 가격 인상을 저지하려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 등임.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모두 진압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력을 잃고 해산되었음.
- 이란 정부는 히잡 시위 초기 강경 대응으로 맞서다 현재는 소요사태에 다소 무관심한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공개 처형과 같은 극단적인 처벌을 가하고 CCTV 설치로 여성의 복장을 더욱 제한하는 등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한 시위가 완전 소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히잡 시위에 이어 연이은 여학생 독극물 테러 사건과 정부의 무대응으로 여성들의 불만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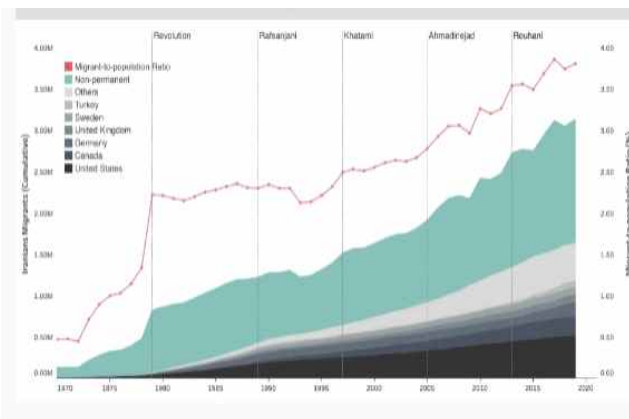
- 2022년 11월부터 발생한, 히잡 시위에 대한 공격으로 추정되는 여학생 대상 독가스 테러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국제사회의 진상 규명 요구가 거세지자 이란 정부는 뒤늦은 대응에 나섰으나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함.
- Reuters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슬람교 시아파 성지인 콤(Qom)에서 시작된 여학생 대상 독가스 테러는 2023년 3월까지 약 230여개 학교에서 5,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피해 여학생들이 무기력증과 거동장애, 두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음.
-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내무장관은 의심 표본을 수집해 분석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독가스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와 반이란 세력이 사태를 키웠다고 비난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함에 따라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시위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사회안정

억압적인 신정일치 체제에 대한 반발로 자국민의 해외 이주 증가 및 두뇌유출 심화

- 국외로 이주한 이란인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0.5백만 명에서 2019년 3.1백만 명으로 급증했음. 현재도 부유층은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시키는 등 국외 이주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체제 부적응으로 인한 도피성 이주자가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됨. 전체 이주민 중 83%가 이란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민 선호국은 미국(32%), 캐나다(14%), 독일(11%), 영국(6%) 등의 순임.
- 이주민의 상당수가 해외 유학 후 현지에 정착하는 두뇌유출(brain drain)이 가속화되어 이란의 교육과 기술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선진국 대비 낮은 개인소득, 신정일치 체제의 사회/정치적 억압, 인권 탄압, 낮은 교육의 질, 경제제재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두뇌유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음.
- 1980~83년 문화혁명을 통해 교육 과정과 내용을 이슬람화하고 기존 대학교수를 비롯한 지식인들을 해고하는 등 대대적인 교육 숙청(cleansing) 작업을 실행한 이란 정부는 실용적인 인재 양성보다 '이슬람 공화국의 가치 수호와 이념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궁극적인 교육 목표를 두고 있어, 두뇌유출 현상을 '문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떠나 국가의 정치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현상으로 여기며 방관하고 있음.
-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외국 유학생(대학생이 약 70만 명) 중 학업 후 귀국하는 학생 수는 1979년에는 전체의 90%에 가까웠으나 현재는 10% 미만으로 감소하였음. 현재 이란 출신 학자 약 11만 명이 외국 대학이나 대학 유관기관,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이란 연구인력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치로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상황임.

[그림 7] 이란의 국외 이주민 규모와 인구대비 비율



자료: Stanford Iran 2040 Project

[그림 8] 1980년 이후 국외 거주 이란 학자 수 및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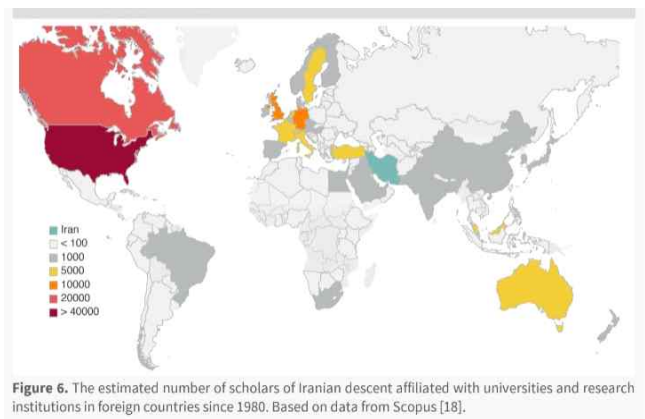


Figure 6. The estimated number of scholars of Iranian descent affiliated with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foreign countries since 1980. Based on data from Scopus [18].

자료: Stanford Iran 2040 Project, Scopus

- 이란은 수학 기간(years of schooling)을 1990년 4.2년에서 2018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질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아 졸업 후 취업을 향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해 여성 10명 중 1명은 취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취직 후에도 급여나 승진에서 남성 노동자에 비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여성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사회안정

빈부격차 심화로 사회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 고조

- 2021년 이란의 연평균 중위 가계소득은 6,220달러로 MENA 국가 평균(34,110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2023년 소득구간별 월평균 소득은 저소득 구간 11.3백만 리알, 중위소득 구간 44.8백만 리알, 고소득 구간 200백만 리알로 집계되어 중위소득자와 고소득자 간 임금 격차가 특히 심한 편임.
- 빈곤층(세계은행 분류 중상위소득국 기준 하루 6.85달러 미만)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인 2019년 전체 국민의 27%로 2018년 대비 5% 포인트 증가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소득격차가 빠르게 확대되어 기본 의식주 해결조차 어려운 극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취약계층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주도의 인프라 건설과 신사업 발굴 계획이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보류 또는 중단되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실업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저소득층인 여성 및 농업 인구의 빈곤층 편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이 30% 이상으로 젊은 세대의 빈곤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실업률 추이(%) : 9.2('18) → 11.0('19) → 11.4('20) → 11.3('21) → 11.1('22*)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퇴직연금 지출 증가로 사회보장 시스템 붕괴 우려

- 1980년대 베이비 붐으로 출생한 인구가 은퇴연령기에 진입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캠페인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노동활동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음. UN에 따르면 이란은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로, 2045년까지 은퇴연령 인구가 전체 노동인구의 25%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퇴직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경제에 심각한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Iran Focus News는 Ahmad Meidari 사회복지부 차관의 말을 인용하여, 2018년 퇴직연금 관련 정부 부채가 1,700조 리알에 달했다고 보도함.
- 이란의 비정부기구인 사회안정기구(SSO)는 15.5백만 명의 노동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구성된 사회안정보장기금을 재원으로 매년 4.3백만 명의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88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한 국가연금기금(NPF)은 163만 명의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연금 수급자 수가 연금보험료 납입자 수를 초과하는 상황임. 기금/보험 관련 감독기관과 감시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현재 철강산업연금기금(Steel Pension Fund)의 관리 부실에 대한 800여건의 소송(관련 소송금액 100조 리알)이 진행 중인 사례에서 보듯이 관리 부실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23년 1월 Majlis(이란 의회) 공개 회기에서 Sowlat Mortazavis 노동부 장관은 이란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시스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26년에는 사회안정보장기금과 국가연금기금이 동반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

국제관계

핵합의(JCPOA) 복원 협상 타결의 불확실성 증대 및 서방 국가들의 대 이란 추가제재 압박

- 이란과 P5+1* 간에 2015년 7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 체결된 이후 2018년 5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탈퇴로 JCPOA가 무효화됨. 2021년 4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재협상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한 악영향, 재협상의 주요 쟁점 관련 합의 난항 등으로 향후 협상 진전에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함.
- 협상 초반 유럽연합(EU)은 중재자로서 합의 정상화 노력에 의욕적이었으나,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우크라이나에 실사단을 파견하고 사실 확인을 요청한 데 대해 이란이 불응함에 따라 협상에 소극적인 자세로 전환함.
- 재협상의 3대 주요 쟁점은 ①혁명수비대를 해외 테러 집단 목록에서 삭제할 것(이란측 요구), ②일부 미신고 시설에서 검출된 미확인 핵물질에 대한 재실사 및 이란 정부의 해명(서방측 요구), ③향후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협상 파기 재발 방지 약속(이란측 요구) 등임. 이는 현실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불가능한 협상안으로, 현재 협상동력이 상실된 상태라고 평가되고 있음.
- 이란 정부는 자국의 정규 군사조직인 혁명수비대를 국제 테러조직과 동급으로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은 주권 모욕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혁명수비대를 제재 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2023년 4월 미 의회의 의원 130인 이상은 혁명수비대의 테러리스트 지정(미국은 2019년 지정)을 EU에 촉구하는 joint letter에 서명하였음.
- 2022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란 정부에 요구했으나, 이란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음. IAEA는 JCPOA상의 합의 이행 의지와 능력의 검증 주체로, IAEA의 조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합의 불이행에 해당됨.
- 2023년 5월 UN 핵 Watchdog 보고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비축량이 JCPOA에서 정한 기준치의 23배를 초과했다고 발표함. 이후 UN은 이란 정부가 JCPOA 내용에 부합하는 감시장비를 추가 설치하고 우라늄 농축건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IAEA는 이란의 미신고 시설 3곳 중 1곳에 대한 추가 조사건을 종결짓겠다고 발표함.

미국과 이란 간에 비공식 핵합의 논의 진행 중

- 2023년 3월 이후 미국과 이란은 실무선에서 비공식 협의를 시작하였음. 이 협의는 JCPOA처럼 구속력이 있고 미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공식적이고 문서화된 협약이 아니라 양해각서(understanding)의 성격이 강한 임시 합의로 JCPOA 복원을 위한 초석을 다지려는 의지가 엿보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임.
- 미국은 이란에 ①이라크와 시리아 주둔 미군을 위협하는 군사적 공격 중단, ②IAEA와 UN의 핵사찰에 대한 적극 협조 및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 이하로 유지, ③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 자제, ④이란에 억류된 이란계 미국인들의 석방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이란은 이를 대가로 ①원유 수출을 하루 100만 배럴까지 보장, ②원유 저장선박의 불법 나포 중단, ③UN과 IAEA 차원의 징벌적 제재 금지, ④전 세계에 예치된 이란 자산의 동결 해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짐.

국제관계

서방의 제재에 맞서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 강화

- **(러시아)** 이란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러시아는 중동 지역에서 이란과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도로, 철도 등 이란 내 교통 인프라 건설 투자를 늘리고 있음.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제재 강화 이후 이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나, 에너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 중국 무역에서는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동시에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협정(2022년)을 체결하고 군사 교류를 활성화하며 방어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실리적 외교노선을 추구하고 있음.
- 과거 카스피해를 경유하던 러시아로부터 이란으로의 석유제품 수출은 최근 높은 항공 운임료와 해상 수송 관련 러시아산 제품 가격 상한(서방의 경제제재의 일환) 등으로 인해 철로 수송으로 선회하였음. Alexander Novak 러시아 부총리는 2022년 가을부터 양국 간 철로 운송을 개시하고 2023년 2월에는 러시아가 3만 톤 분량의 휘발유와 디젤유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는 철로를 통해 이란으로 수출했다고 밝혀 양국 간 철도 운송에 의한 에너지 무역이 본격화됐음을 시사함. 다만, 철도 교통 정체로 수출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이란은 제재로 인한 경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사실상 이란의 수출입 대부분이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중국과의 관계는 외교보다 경제적 결속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2023년 3월 오랜 적대 관계이자 단교 상태였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중국의 중재로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관계 복원에 합의하며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2021년 3월 중국은 이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5년 간 약 4,000억 달러를 투자해 경제, 정치, 안보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갈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재정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임.
-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는 서방의 경제제재 지속으로 인한 소득격차 심화와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불만이 체제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이어지자 이란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대 중국 무역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비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대 중국 원유 수출국 3위이며,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로 대 중국 무역에서 연간 적게는 15억 달러, 많게는 30억 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2년 12월 이후 G7(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과 EU 27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을 부여함. 이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중국은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25달러나 더 낮게 책정된 가격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란산 원유는 그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수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
- 반정부 성향의 언론 Iran International은 이란 정부가 원유를 생산비보다 단 7달러 높은 배럴당 37달러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원유 수출량이 하루 80만 배럴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부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함. 실제로 중국은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산 원유를 구입하는 대가로 국제유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2022년 이란의 실제 원유 부문 수익이 이란 정부가 발표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음.

국제관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외교관계 복원을 기점으로 아랍 국가들과 협력 강화 추진

-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GCC 6개 회원국(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중 UAE가 2020년 이스라엘과 Abraham 협정을 체결하며 이스라엘의 중동 내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한 이란은 GCC 회원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이란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수니파 국가들과도 화해를 시도함에 따라 시리아, 예멘, 레바논 내전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역내 평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 (사우디 아라비아)** 2023년 3월 시아파 종주국 이란과 수니파 종주국을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중개로 7년 간의 외교관계 단절과 군사적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양국 간 개방외교를 천명하였음. 이어 4월 15일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수단 내전으로 인해 고립된 자국민 탈출을 돕기 위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협력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해군이 65명에 달하는 이란 민간인들의 고국 귀환을 성공 시키면서 양국 간 협력 분위기가 고조됨.
- 이란의 Ehsan Khandouzi 경제-재정장관은 2023년 5월 12일 경제사절단 대표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Jeddah) 지역을 방문했으며 이는 양국 간 외교관계 복원 후 장관급 인사의 첫 공식 방문임. 양국은 연합 상공회의소를 개설하고 항공협정(flights agreement) 체결로 양국간 직항 노선도 재개할 한다는 계획을 밝혔음.
- (UAE)** UAE는 중국에 이어 이란의 제2위 교역상대국으로, 양국 간 교역규모는 연간 240억 달러로 추정됨. 양국은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로 인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2023년 5월 9일 이란 상공회의소(ICCIMA) 대표는 UAE 상공업 연합 대표와의 회담을 통해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UAE, 바레인과의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시리아)** 시아파의 소수 분파인 알라위파가 군과 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에서 2011년 정부군과 수니파 반군 세력 간 내전이 발생하자 이란은 정부군을 지원해 왔음. 2023년 6월 Washington Post는 잭 테세이라 미 공군 일병이 유출한 미국 정부 기밀문서를 인용하여 "이란이 시리아 주둔 미군에 치명적 손실을 입히기 위해 도로 매설 폭탄 실험, 무장세력 조직 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미 감정을 부추기며 시리아인들을 선동하고 '조정본부'를 설립하는 중"이라고 보도함.
- (예멘)** 이란은 종파 간 갈등으로 정정불안에 시달리던 예멘의 불안정한 국내상황을 이용하여 남부 후티 반군을 적극적으로 지원, 내전에서 반군에 패퇴한 정부군이 수도 사나에서 밀려나고 하디 대통령이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함. 정부가 남부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이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면서 사실상 시아파 이란과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리전 성격인 내전이 지속되고 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며 예멘 내전의 평화적 해결에 관심이 몰리고 있음.
- (레바논)** 이슬람 시아파 무장세력이자 레바논의 공식적인 정당 조직으로 중동 지역 최대의 테러조직인 헤즈볼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란과 시리아의 지원을 받고 이란 혁명수비대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975~90년 장기 내전이 종결된 후에도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 운동을 이유로 무장해제를 거부해 왔으며, AFP통신은 2023년 5월 보도를 통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해 공개훈련을 했다고 보도함.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율 개선

-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율은 대 이란 경제제재가 완화된 2016~17년 이란이 연체액을 대거 상환하면서 2018년 9월 말 기준 5.6%를 기록하였으나, 미국의 JCPOA 탈퇴에 따른 경제제재 복원 이후 연체율이 점차 상승하여 2022년 9월 기준 74.9%까지 상승하였다가 2023년 3월 말 기준 27.6%*로 하락함. 연체율 하락은 일본 NEXI에 대한 대위변제 또는 채무재조정의 결과로 알려짐.

* 이란의 OECD 회원국 ECA 앞 외채잔액 150.3백만 달러(단기 63.6백만 달러, 중장기 86.7백만 달러), 연체금액 41.6백만 달러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2023.01)	7등급(2022.01)

OECD는 2020년 이후 이란의 국가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유지 중

- OECD는 JCPOA 체결 및 발효 이후 2018년 1월 이란의 국가신용등급을 5등급으로 부여한 적도 있으나, 동년 5월 미국의 JCPOA 탈퇴 및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 선언으로 이란의 국가신용등급을 2018년 6월 6등급으로 1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이후 미군의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 암살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을 우려하여 2020년 1월 이란의 국가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1등급 하향 조정 한 후 2023년 6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국제신용평가3사(S&P, Moody's, Fitch)는 이란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이란 경제는 2018년 미국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탈퇴 및 경제제재 복원 직후 악화되었으나, 2021년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의 국제가격 상승과 생산량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4.7%의 플러스 성장을 보였음. 그러나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과 이로 인한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화로 2022년에는 2.5% 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 규모는 월평균수입액의 9.7개월분, D.S.R. 1.5%,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 2.6% 등으로 외채상환능력 지표는 양호한 편임.
- 이란은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응하여 중국 및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수니파 종주국을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역내 패권을 두고 오랜 경쟁관계에 있었으나, 2023년 3월 중국의 중재로 양국 간 단절되었던 외교관계를 복구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란의 드론 제공 의혹, IAEA 핵시설 신고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JCPOA 복원 추진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대 이란 경제제재가 강화되며 하이퍼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 전국적인 소요사태 발생 등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은 편임.